

보도시점 2024. 8. 6.(화) 12:00 / 배포 2024. 8. 6.(화) 08:30  
< 8. 7.(수) 조간 >

## 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, 8월 7일부터 시행

-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 -
- 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 -

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,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‘시정방안 제출제도’가 시행된다.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.

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른 것으로,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<sup>①</sup>(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, <sup>②</sup>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, <sup>③</sup>기업결합 신고요령)도 제·개정하여, 8월 7일 시행한다.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, 이번 법률과 행정규칙 시행 역시 이 일환이다.

### <시정방안 제출제도>

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하여 부과해왔으며,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. 8월 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, 제출된 방안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. 이러한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.

①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, 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,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②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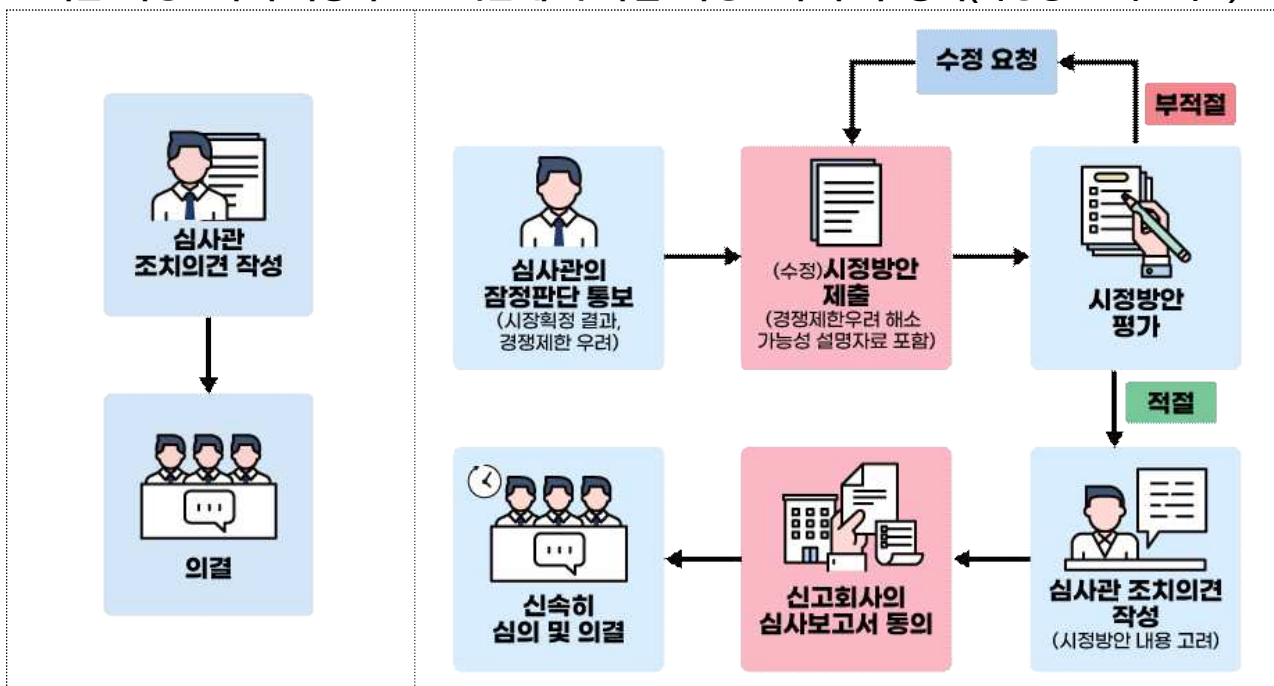
③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. 이때,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(최대 120일)에서 제외된다.

④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.

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,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였고,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해진다. (fast-track)

구체적으로는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심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.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,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단축된다. 결과적으로 의결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.

#### <기존 시정조치 부과방식> <새롭게 추가된 시정조치 부과 방식(시정방안 제출제도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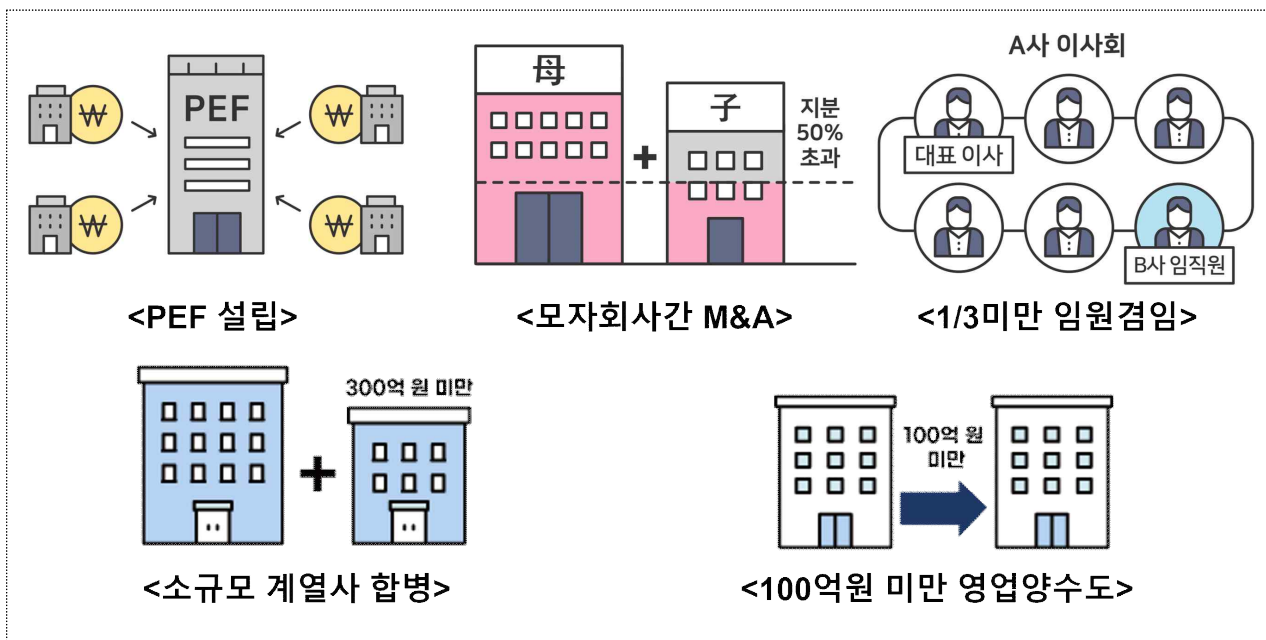


참고로,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.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나 기타 방법으로 독과점 우려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음은 현행과 마찬가지로이다.

## <신고면제 범위 확대>

한편,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,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. 구체적으로, ①PEF(사모집합투자기구) 설립, ②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, ③타 회사 임원 총수의 1/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, ④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, ⑤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%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.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었는데,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서 그간 GDP가 4배가량 성장하였음을 고려하여 이번에 상향한 것이다.

### <신고면제되는 기업결합 유형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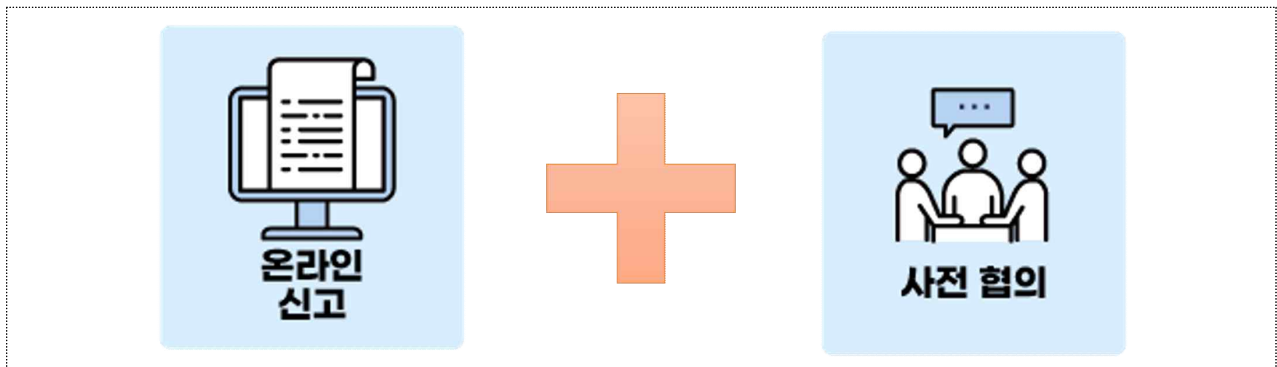
8월 7일 이후 위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. 다만, 8월 7일 전 해당 유형과 관련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.

참고로, PEF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,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## <기타 정비사항>

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하였으며,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### <기업결합 신고 인프라 정비>



## <기대 효과>

앞서 본 바와 같이 제·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·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.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.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전세계 경쟁당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만큼,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.

또한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‘선택과 집중’할 수 있게 되고, 온라인 신고 및 사전협의를 활성화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.

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·심사제도를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, 시장의 경쟁은 내실있게 보존하는 한편, 기업결합에 따른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붙임 1 : 새로 시행되는 내용별 관련 규정 일람

붙임 2 : 제·개정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또는 전문

- 개정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 
(기업결합 부분 발취)
- 제정 「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」
- 개정 「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」  
(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부분 발취)
- 개정 「기업결합 신고요령」

담당 부서	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병건 (044-200-4932)
		담당자	서기관	안석우 (044-200-4934)
			사무관	김선영 (044-200-4941)
	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	책임자	과 장	권혜정 (044-200-4121)
담당자		사무관	오세영 (044-200-4123)	



**붙임 1**
**새로 시행되는 내용별 관련 규정 일람**

내 용		관련 규정
시정방안 제출제도	제도 일반근거	개정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	제도 세부 운영 기준 (보도자료 본문 1~2페이지 ① ~ ④)	제정 「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 세부 운영고시」
	심의 Fast-Track	개정 「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」
신고면제 범위 확대	①PEF 설립, ②모자회사간 기업결합, ③1/3미만 임원겸임, ④300억원 미만의 계열사가 합병되는 경우	개정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	⑤소규모(100억원 미만 등) 영업 양수도 거래	개정 「기업결합 신고요령」
기타 정비사항	온라인 신고 / 신고 관련 사전협의	개정 「기업결합 신고요령」